데스크 시각

심판의 시간

임동욱
선임기자·이사

6·1 지방선거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풀뿌리 민주주의 축제인 지방선거가 목전에 다가왔지만 광주·전남 지역 민심은 편치 않다. 정치적으로 독점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이 '역대급 참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엉망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대선 패배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고심어린 공천을 기대했던 지역 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이는 '공천=당선'이라는 정치적 오만과 함께 차기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지역위원장들의 이해관계가 빚어낸 결과라는 평가다. '혁신 공천'을 약속했던 민주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도 광주·전남 지역의 '막장 공천'을 걸러내지 못하고 들러리가 됐다.

민심 외면한 역대급 막장 공천

민주당의 '누더기 공천'은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인선에서 '광주·전남 패싱'이 현실화된 시점과 겹치면서 민심의 저변에는 "어쩌다 호남 정치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짙은 냉소가 자리 잡고 있다. 공천에서 최소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의 리더십은 물론 신뢰도 붕괴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신안군수 경선에서는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후보가 공천됐고, 목포시장 경선은 당원명부 유출 파문의 당사자가 후보로 선정됐다. 영암·장흥군수 공천은 재경선이 펼쳐지는가 하면 순천시장 후보는 전략 선거구로 지정되는 우여곡절 끝에 선정됐다. 또 강진군수 경선은 파행을 거듭하다 무공천이 결정됐고 담양군수 후보 선정 과정에서는 현직 국회의원의 개입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관심을 모았던 청년·여성 기초단체장 공천은 무산됐다. 오히려 나주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청년 주자를 견제하기 위해 3인 경선이 치러졌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지방의원 공천은 지역위원장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보좌진 출신들이 공천되는가 하면 지역위원장에 대한 충성도가 공천의 기준이 됐다는 말이 나오는 등 '줄 세우기 공천'이 횡행했다. 또 '돈 공천' 의혹이 여러 곳에서 제기됐고 권리당원을 미끼로 선거 브로커들은 여전히 활개를 쳤다.

특히 전남은 초선 현역 국회의원들이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 다섯 명이나 참여하면서 각종 의혹이 증폭됐다.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미는 예비 후보에 점수를 더 주는가 하면 공관위에 참여하지 않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천 민원을 반영하는 '짬짜미 공천'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공관위에 참여한 한 현역 국회의원은 전남 지역의 공천 파동에 대해 "지역 기반이 취약한 초선 국회의원들이라 아무래도 다음 총선을 의식한 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별다른 잡음 없이 정상적으로 경선이 이뤄진 지역을 찾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다. 감동은 실종되고 반목만 남은 셈이다. 이는 선거 이후에도 지역 민심의 분열로 이어져 지역 발전에 상당한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비판 여론은 잠깐이고 다음 총선 티켓을 위한 조직 확보는 '현찰'(표)이라는 계산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파행 공천에 거세지는 '무소속 후보 바람'에는 슬그머니 '윤석열 정부 견제'를 내세우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최소한의 염치를 잃어버린 정치,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이성복, '그날')는 시구가 아프게 다가오는 지점이다. 민주당이 과연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비판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투표 참여로 퇴행 바로 잡아야

결국 모든 것은 유권자에 달렸다. 퇴행은 바로잡지 않으면 반복된다. 경쟁과 견제가 없는 민주당 독점 구도에선 더욱 그렇다. 깨어있는 시민 의식으로 적극적인 투표에 나서는 것이 답이다. 반칙으로 민주당 공천 티켓을 얻은 후보와 이를 설계한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강고한 연대를 통해 민심의 바다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 줘야 한다.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정치 격언이 있다. 시민은 유권자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자주 인용된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는 호남 정치의 개혁을 알리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지역 유권자들이 쭉정이를 골라내는 지혜를 발휘, 무기력한 호남 정치를 바로 세우고 지역의 미래를 열어가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민심보다 당심' 지방선거 제도 개선 서둘러야

광주·전남 지역 지방선거가 좀처럼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지역 정치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해 잡음이 끊이지 않는 데다 무투표 당선자까지 속출하면서 선거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 저하는 후보 경쟁률에서도 나타난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모두 431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다. 한데 후보 등록 결과 826명이 출사표를 던져 평균 경쟁률은 1.91 대 1을 기록, 지난 2018년의 2.28 대 1보다 크게 낮아졌다.

그나마 이 가운데 광주 13명, 전남 57명 등 무려 70명이 단독 출마 등에 따라 무투표 당선됐다. 4년 전 19명에 비해 네 배 가까이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민주당 지지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 다른 정당들이 후보조차 내지 못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당락이 정당 공천 과정에서 사실상 당원들에 의해 결정되다 보니 유권자들은 투표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후보 선출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다.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으로 여겨지다 보니 원칙과 기준이 수시로 바뀌고 내천(內薦), 줄 세우기, 금품 거래설 등의 의혹들이 잇따라 터져 나와 후유증이 심각했다. 지역 연고도 없는 인사를 당원과 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영입하는가 하면, 일부 후보는 범죄 전과와 징계 이력에도 공천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도 유권자들은 정당이 내세운 후보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뽑을 사람이 없다'는 한탄이 절로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 정당 공천이 허용되면서 거대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후보 공천에 일일이 개입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정당의 정치 독점을 타파하기 위해 정당 공천 폐지와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지방선거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반려동물 50만 마리' 광주에 장례시설 확충을

광주시민들이 키우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5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지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은 37만 명, 반려동물 수는 49만 마리에 달한다. 한데 가족처럼 함께 생활하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장례를 치를 곳이 단 한 곳도 없어 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장례'를 떠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은 흔히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고 비유하는 마지막 이별의 순간과 마주하게 된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이 죽으면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생활 폐기물로 버리거나, 동물병원 등을 통해 의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반려동물 장례 시설에서 화장 등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던 이들은 대부분 가족이나 다름없던 개·고양이를 '쓰레기' 취급하듯 버리는 대신 장례 시설에서 예를 갖춰 보내 주길 희망한다. 현재 전국에는 반려동물 장례 시설이 65개가 있지만 광주·전남에 등록된 곳은 세 곳뿐이다. 그나마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장례 시설은 2년여 전부터 휴업 상태여서 광주시민들은 함평이나 여수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광주에도 장례 시설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 내에 반려동물 장묘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부지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과 동물 수가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장례시설 확충은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혐오 시설'이라며 반발하는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가 관건이다. 행정당국과 관련 단체,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은펜칼럼

버나드 쇼의 묘비명

고성혁
시인

떨어진 대통령 후보도, 당 대표도 찌라시 비슷하게라도 반성문을 썼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며, 또 한 사람은 용단이고 희생이라며 선거에 나섰다. 짝짜꿍, 지역구를 다정스럽게 주고받으면서. 쉽게 이기라는 것이겠지. 이거 뭔가 삼류 야바위 냄새가 나지 않은가. 찍은 사람들은 정작 애간장이 다 녹아 없어졌는데 무엇이 잘못됐다는 말 한 마디 없는 사람들의 욕심으로 복장이 터질 것 같다. 빠빠빠. 결과가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 문빠에서 다시 이빠로 대물림을 했구나. '졌잘싸'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참혹한 상처가 선연한데 5년 동안 무얼 하고 있다가 '검수완박'이라며 탈당까지 시키나. 지하의 김대중, 노무현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모르겠다. 이 양반들 정말 귀신에 씌었나!

아일랜드 출신 노벨문학상 작가 버나드 쇼(1856-1950)는 자신의 묘비에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직접 주문해 새겼다. 며칠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어떤 성적을 거둘까. 대선 이후 우물쭈물 칠십오 일을 허송세월했으니 결과야 안 봐도 비디오다. 이쪽 빼면 저쪽이나 그쪽 모두 불 꺼진 항구다. 쯧쯧쯧. 혀 차는 소리, 울분을 터뜨리는 소리가 사방천지에 가득하다.

국민의힘의 젊디젊은 대표에게 대항할 논리가 그리도 없었을까. 우리 젊은이들을 이리저리 갈라 분쟁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 표를 얻은 것. 본질은 그것뿐인데 그걸로 그렇게 큰 이슈를 만들어주다니. 그래 놓고도 반성은커녕 희한한 명목으로 다시 선거에 뛰어들어 저잣거리를 휘젓는 사람들의 이 저녁, 으악새가 우는 것도 아닌데 왜 이다지 서글픈가. 뉴스 시간에 티브이를 끄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지는 게 맞다. 또 질 것이 뻔하다. 반성도 없고 과정마저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어찌 믿겠는가.

비아냥댄다고 나무라지 말라.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걸 말할 수 있는 당신의 권리는 목숨을 걸고 옹호하겠다." 볼테르의 말이다. 표현의 자유가 당신들을 지금의 자리로 호명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 부디 귀를 세우고 들으라. 윤석열 내각을 보라고? 내각과 로펌을 왔다 갔다 하며 20억 원을 받았다는 한덕수 씨와 줄줄이 이어진 내각 구성원들의 궤적이 '조국' 때보다 못하고, 대통령실을 모두 검찰 사람들로 채운 뒤 한동훈 씨의 편을 가른 인사로 마침내 검찰공화국이 되었다는 비판? 안다. 알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아가패 인사'(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만 쓰는 패밀리 인사)라고 하지 않은가.

그 와중에서 광주·전남 출신이 차관 자리 하나를 차지했다. 용하디 용하다. 인사가 만사인데 이래가지고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이루어질까? 내로남불 때문에 정권을 잡아 놓고 그보다 더한 내로남불이라니. 이 정부의 형해화된 공정과 상식을 더는 얘기할 것 없지만 그것은 이쪽의 생각, 그 반대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여당 인사들이 혹시 5·18의 헌법 전문 수록까지 이뤄낸다면 생각은 더 바뀔 것이다.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부의 내각 임명도 별반 다르지 않았잖은가.

1987년만 기억하지 말기를. 최루탄 자욱한 거리를 두 주먹 불끈 쥐고 투쟁했던 건 당신들만이 아니다. 독선을 버리고 끊임없는 성찰과 혁신으로 민중과 함께 하기를. 제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참혹한 결과를 잊지 말고 과정의 정의를 위해서도 힘쓰기를. 당신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김대중의 준비된 비전, 노무현의 헌신과 희생은 어디로 갔는가. 턱도 없는 '20년 집권'의 교만을 버리고 노무현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진 혁신의 길로 되돌아오기를. 제2의, 제3의 박지현을 영입하기를. 그 젊은이가 당신들보다 천 배 만 배 낫다는 걸 왜 당신들만 모르는가.

다시 버나드 쇼의 얘기로 돌아가자. 영문 번역가 최영범은 묘비문 중 '어슬렁거렸다'인 'stayed around'를 모 회사가 카피를 위해 일부러 '우물쭈물하다'로 오역했다고 말한다. 버나드 쇼의 묘비는 죽음을 벗 삼은 그의 예지였던 셈이다. 민주당, 우리는 당신들의 볼모가 아니다. 제발 뒤로 가지 마라. 지금이라도 반성하라. 부디 민심 앞에 겸손하라. 그것이 당신들을 구원하는 생명줄이다. 쯧쯧. (버나드 쇼의 묘비 원문: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살 만큼 살다 보면 이렇게 될 줄 이미 알고 있었네.)

無等鼓

현수막

6·1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과거와 달리 선거 열기가 뜨겁지 않다. 거리 곳곳에 내걸린 각 후보의 현수막(懸垂幕)을 통해 선거가 다가왔다는 것을 인지할 뿐이다.

현수막은 극장 따위에 드리운 막 또는 선전문·구호문 따위를 적어 드리운 막이다. 한자 뜻을 그대로 풀면 '아래로 늘어지게 매단 막'을 말한다. 엄밀히 따지면 세로로 된 것만이 현수막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한데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수막은 대부분 가로 형태다. 가로 형태는 횡단막(橫斷幕)이라고 국어사전에도 실려 있다. 하지만 현재 가로·세로 형태 모두 현수막이라고 불리고 있다. 영어로는 배너(banner)나 플래카드(placard)라고 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를 현수막이나 펼침막으로 순화해 쓰도록 하고 있다.

현수막은 각종 행사나 광고를 비롯해 정치 선전과 같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된다. 요즘에는 아파트·오피스텔 광고를 위한 불법 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어 이를 단속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애를 먹고 있다. 법적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내거는 현수막은 사실 모조리 옥외광고물법 위반이고, 철거 대상이다. 반면 선거철 각 후보가 내건 현수막은 다르다. 공직선거법상 각 후보에게 법적으로 제한된 현수막을 내걸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현수막 때문에 광주를 연이틀 방문했다. 광주 기초의원 후보의 현수막 훼손 소식을 듣고 현수막을 직접 다시 걸기 위해 온 것이다. 매번 선거철이면 현수막·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미뤄 보면 이 대표가 현수막을 매개로 '정치적 퍼포먼스'를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편에선 국민의힘이 광주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역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관심이 덜하더라도 4년간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각 후보의 현수막을 한 번씩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cki@

기 고

원전, 신재생 에너지가 될 수 있을까?

김체현
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
전기과 1학년

현재 지구에서는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시베리아의 영구동토층이 손상되고, 세계 각지에서 산불·폭우·폭설·태풍 등 자연재해의 빈도수와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여러 국가들은 탄소중립을 선포했다. 탄소중립의 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zero)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나 전기차 개발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중 탄소를 줄이기 위한 가장 큰 과제가 있다. 바로 발전이다. 지구에서 온실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정해져 있다. 그런데 2019년에 처리 가능한 용량을 초과해 약 510억 t을 더 배출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발전소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량은 약 138억 t(27%)이다. 또한 화력 발전소는 전 세계 발전소의 5%이지만, 탄소 배출량은 73%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화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발전은 어떤 방식이 있을까? 많은 나라에서 태양광발전과 풍력, 조력 등 다양한 발전 방식을 실행하고 있지만, 전력량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여러 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을 신재생 에너지의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라고 불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안전성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는 회복 불가능한 재앙을 불러 왔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는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었고, 아직도 불치병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또 방사능 폐기물 처리도 문제일뿐더러 지금까지 지어진 원전들은 부실하고 그마저도 수명이 다 돼 가는 실정이다. 원자력 발전은 탄소를 보다 적게 배출하고 발전 성능이 우수하지만,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시한폭탄 같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위험성이 큰 원자력 발전이 신재생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일까?

유럽연합(EU)은 보다 안전한 핵연료를 사용하고자,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가동하는 등의 엄격한 조건이 포함된 'EU 택소노미'(EU Taxonomy)라는 위임법을 내놓았다. 이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 체계이다. 한데 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요구하는 기술들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만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관련 기술이 개발되면 원자력 발전을 탄소중립에 활용하고 신재생 에너지로도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사실은 확실해 보인다.

영국·프랑스 등 원전 확대 정책을 내세운 나라들은 130여 개의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하여 안정성뿐만 아니라 경제성까지 갖춘 원전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차세대 원자로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가 있다. 여러 주요 장치들이 배관으로 연결된 기존 원자로와 달리 일체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원자로는 사고 발생 시에도 위험물 배출이 줄어든다. 우리나라에서도 외부에 누출되면 굳어 버리는 액체 핵연료인 용융염(Molten Salt)을 사용하여 사고 시에 핵연료가 누출되지 않는 용융염 원자로(MRS)를 연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차세대 원전을 개발하고 있다.

물론 지금 당장 관련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 시설 부지도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을 EU 택소노미 기준에 맞추기는 힘들겠지만, 지금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의 탄소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